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근거 마련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4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근거 마련	3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74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나.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여가·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이 가사·여가·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지역별 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종업무의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권 보장 및 대체인력의 확보·지원) ① 사회복지사 등이 가사·여가·휴식 등을 위하여</u>

<u>제3조의2 ~ 제3조의5</u> (생략)	<u>업무를 설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휴직·교육·훈련·질병·산업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지역별 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종업무의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제3조의3 ~ 제3조의6</u> (현행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생활 균형 및 휴식권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현행법 제3조¹⁾를 근거로 하여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연도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25	5,125	5,702	5,937	6,245	6,535	6,650	6,800	7,120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공백 발생 등을 우려하여 휴가 등을 활용하기 어렵다²⁾는 점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업무공백 최소화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등을 위해 추진되었고,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량(36.6%), 눈치보임(34.7%) 등으로 인하여 법정휴가 사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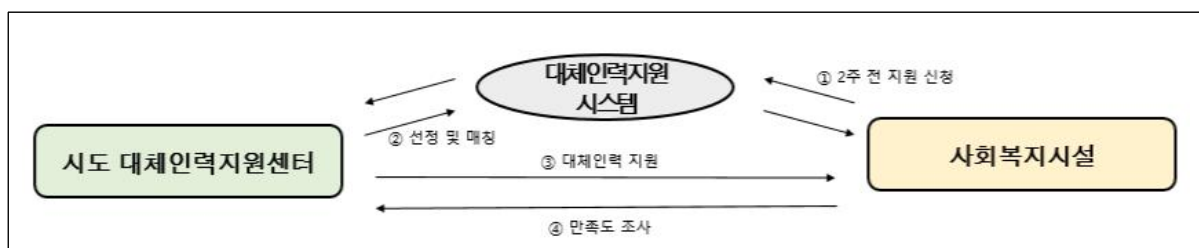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3)에 따른 사회복지시설⁴⁾을 대상으로 돌봄 및 조리 인력의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1회 연속 7일 이내, 1일 8시간을 지원하며 2026년 기준 274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개요 >

구분	내 용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지원 사유	휴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시설종사자 결원
지원 기간	1회 연속 7일 이내, 지역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 지침으로 최대 60일 이내 연속지원 가능
지원 단가	돌봄직·시도 관리직: 월 273만원, 조리직: 월 256만원, 중앙관리직: 월 253만원 ('25년 기준,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대체인력 지원 절차 >



자료: 보건복지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그런데, 사업의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3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일반적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문⁵⁾에 따르더라도,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을뿐,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체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 현장의 증가하는 대체인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신청 대비 지원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돌봄 등 사회복지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소진 등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2026.7.1. 개정 2025.12.30.)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대체인력 신청 대비 지원 건수 및 지원율 추이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신청일수	65,958	81,909	95,781	111,496	110,021
지원일수	45,685	46,656	51,223	52,075	50,285
지원율	69.3%	57.0%	53.5%	46.7%	45.7%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휴직 등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인력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가나 교육·훈련 등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공백을 메워줌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회복지사 등의 휴직·질병·산업재해 등 비교적 장기간 근로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일시적 업무 공백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19)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수진의원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대체인력지원센터 및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 마련, 대체인력의 차별없는 처우 적용 등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예산 및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지원이 가능한 업무 공백 발생 사유를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시설로 수정하며,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무지원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기획예산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 휴가·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타 직역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경우, 국가·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